

남북한 군사전략 구도 하의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과 그 대비**

김 태 응*

목 차

- I. 서론
- II.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구도의 변화와 그 단계
- III. 평화체제 관련 남북한의 기본 입장 및 전략과 쟁점 분석
- IV. 평화체제 구축 기본 조치 강구 방향
- V. 결론 : 긴장완화 및 통일 달성을 위한 평화체제의 대비방향

〔 논문 요약 〕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평화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왔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전쟁과 평화의 관계’로 연관시킬 수 있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궁극적으로 평화가 목적이며 전쟁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거나 배비하지 못하면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평화의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로서의 긴장완화란 원래 일방의 소망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국제협력 체제로서, 주어진 현상으로서의 정치적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주어진 정치적 상황을 재조정함으로써 모종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든가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현상의 구조가 정치적 대립을

* 원광대학교 교수

** 이 논문은 (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주최 하에 개최된 2011년도 대통협 제2차 특강에서 작성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타파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내에서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정전체제의 극복과 평화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바, 이러한 평화의 구조화를 위한 군사·정치적 실질 조치가 남북 상호 간 합의와 노력에 의해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상황요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남북한 전략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평화체제 이행에 따른 우리의 주요 조치들을 추론한 후,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선행적 요소들을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주제어 : 전쟁과 평화, 긴장완화, 국제협력 체제, 평화체제, 정전협정, 평화협정, 북한변화, 평화의 구조화, 북핵 폐기, 주요 쟁점, 군사·정치적 조치, 선행적 요건

I. 서 론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평화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왔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전쟁과 평화의 관계’로 연관시킬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는 ‘전쟁의 신’으로 얘기되지만, 전쟁이란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야누스’는 곧 ‘전쟁과 평화의 양면을 상징’하는 신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신화시대 이후에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인간의 생활사를 통해 정치사상의 핵심과제로 등장하면서, 수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전쟁이 고찰되었고, 평화질서에 대한 상념과정과 철학적 사유과정이 이루어져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찌카(Politica)’를 통해 “전쟁이란 한 국가가 취해야할 진리에 부합되는 이성적인 목적으로 간주될 수 없지만, 지나온 과거의 역사 속에 평화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고 강조하였으며, AD 4세기 말 로마의 군사 사상가였던 ‘베제티우스(Vegetius)’ 또한 ‘군사론’을 통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한마디 경귀로써 개별 국가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최선의 대책을 함축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궁극적으로 평화가 목적이며 전쟁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거나 배비하지 못하면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평화의 보존이 불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동안 한반도는 민족분단의 고통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치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국가 수립에 대한 민족의 염원과 달리,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남북한 간의 갈등과 대립

의 역사를 보여 왔다. 그리고 얼마 전의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보여준 북한의 호전성과 무력적화통일 의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에 바탕을 둔 남북한 공존과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 모두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한반도 내에 침예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로서의 긴장완화란 원래 일방의 소망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국제협력 체제로서, 주어진 현상으로서의 정치적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주어진 정치적 상황을 재조정함으로써 모종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든가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²⁾ 여기서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현상의 구조가 정치적 대립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타파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변화가 평화적 방법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긴장완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까지의 남북관계에 나타난 북한의 통치구조나 정치체제, 군사정책 및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인정을 거부하는 ‘무력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한반도 내에서의 긴장완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런 전제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위한 현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군사력 건설의 중·장기 기획 관점의 전략환경 구도 개념을 적용하여, 그 변화를 ‘남북 대치기·공존기·통일기’ 등 시기별로 구분한 다음,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위한 상황 요건을 살펴보고, 대치기의 정전체제 하에서 남북한 평화체제 정립을 위한 관계개선 모색과 발전을 추구하는 남북한 공존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체제에 관한 의미와 상황 요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의 우선순위, 평화체제와 핵 포기의 우선순위, 그리고 평화체제에 관련된 북한의 전략을 살펴 보면서,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바람직한 우리의 입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선행적 대비방향과 근본적 대비방향을 조망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 대비방향으로서 정치·군사적 조치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통일대비에 대한 개략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박준홍,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박영사, 1978), p.48.

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구도의 변화와 그 단계

긴장완화는 원래 ‘데탕트(Detente)’라는 프랑스어에서 기원된 용어로서, ‘팽팽히 당겼던 활을 서서히 늦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냉전적 양극체제가 마치 활시위를 늦추듯 서서히 해빙되어 대결의 시대로부터 공존적 화해의 시대로 접어든 70년대 국제질서의 분위기를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냉전적 기류 이후의 새로운 화해 및 협력 분위기를 이로 대변하여 왔다.

그러나 ‘긴장완화(Detente)’와 관련된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화해를 상징하는 용어로서의 그것이 과연 문자 그대로 적대관계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적대 감정의 휴지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³⁾ 따라서 “긴장완화(Detente)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것처럼, 적대관계의 진정한 해소를 뜻하는 화해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단지 국제질서의 분위기가 다소 완화된 시대를 편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서, 냉전의 차가운 벽에 잠깐 머무르고 있는 순간적인 봄기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다.”⁴⁾

이와 같이 긴장완화가 사랑스럽지 못한 동반자와 함께 우주 비행체 속에 함께 넣어져 그것이 파괴될까 두려워 강요된 평화를 받아들이면서 휴식도 없이 계속해야만 하는 우주 여행처럼 적대관계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공포스러운 전쟁의 위협과 국방소요의 증압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긴장완화(Detente)’의 방법밖에 달리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다.⁵⁾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적 현상을 한반도 상황 및 남북한 구도에 결부시켜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기획 관점의 전략환경 구도 개념을 적용하여 남북한 변화단계를 군사적 상황 측면에서 대치기·공존기·통일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반도 미래단계를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단계·통일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화해 협력기·평화 공존기·통일기로 구분되는 국방부 군비통제 기본정책 상의 단계 구분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한 변화단계는 근본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과 무력적화통일을 근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군사적 상황 측면에서의 긴장완화를 통해 전쟁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장기 군사력 건설기획 관점에서 각 구분 단계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3) George F. Kennan, *Is Detente Valuable?*(Saturday Review, 1976), pp.44-52.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긴장완화란 말이 현실적으로 그 기초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4) 박준홍, 위의 책, p.39.

5) Kenneth E. Boulding, *Conflict and Deterrence*(Harper and Row Publishers : New York, 1962), p. 4.

수 있다.⁶⁾

첫째, '대치기'란, 북한의 대남 적화의지가 지속되는 한편,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계개선 모색과 발전이 추구되는 시기로서, 정전체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둘째, '공존기'란, 북한의 대남 적대 의지가 약화됨과 동시에, 남북한간의 정전상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서, 쌍방 간 군사력 보유 및 운용에 관한 제반 협의나 협정이 준수됨으로써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이 제거되고 남북한 간 전시 전투력과 전쟁 지속능력의 균형상태가 유지되는 시기를 말한다.

셋째, '통일기'란, 한반도 통일이 달성된 이후 남북한이 통합 및 조정되고 안정 상태로 전환되는 시기를 말한다.

여기서 각 단계로의 이행 및 도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요건'을 살펴보면, '대치기'는 '현 상태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통일기'는 '남북한 통일'이라는 명확한 현상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그 도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요건 설정의 핵심인 공존기의 경우, 그 시기에 대한 정의와 국방부의 미래단계 개념을 고려하고 이 시기의 위협감소 형태를 지표로 활용하여, 북한과의 적대적 상황의 변화 관점에서 상황 요건의 형태와 그 징후 조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⁷⁾

첫째, 공존기에는 남북한 군사력 보유 규모에 대한 축소 및 통제의 실현과 같은 상황 요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군사력 규모의 축소 및 통제 조치에는 ①주요 기습 공격용 무기 동결, ②재래식 무기보유 수량의 제한, ③대량 살상무기 개발 통제 및 감축과 폐기, ④기타 전투력 수준 및 전쟁 지속능력의 남북한 간 균형상태 유지를 위한 각종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공존기에는 남북한 간 군사력 운용에 관한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①전방 군사력의 후방배치를 통한 비무장 지대의 확대, ②대규모 부대활동 및 훈련 제한이나 이에 대한 사전 통고, ③접경지역 단위부대 및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그리고 ④기타 기습공격 능력 제거를 위한 각종 조치 등을 취해야 함이 요구된다.

셋째, 공존기에는 남북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합의와 협정이 이루어진다. 즉, 남북한은 평화협정 체결과 기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다양한 협의 및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기존의 정전체제를 해소하는 제반 조치 장구를 통해 비로소 공존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군사력 위협의 실체를 적대적 상황과 군사적 능력으로 보는 국방부 전략 환경 구도 하에서는 군사력 건설기획의 관점에서 공존기 상황을 ①남북한 전투력 수준 및 전쟁

6) 현인택,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 문제 : 세계의 평화협정의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 『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p.84.

7)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 의제와 전략”, 『군비통제』 제47호(국방부, 2010), pp.123-126.

지속능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고, ②북한 기습공격에 대한 대비능력이 구비된 상황(시기)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상황 요건 중 일부 요건만 충족될 경우 공존기 도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남북한 간의 전투력 수준 및 전쟁지속 능력이 균형 상태에 도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습 공격능력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근본적 관점에서의 정책 판단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⁸⁾

Ⅲ. 평화체제 관련 남북한의 기본 입장 및 전략과 쟁점 분석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과 관련된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사실상 그에 대한 논의 대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남북한 평화체제에는 ①남북이 직접 참여하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상태의 관리체제로서의 평화체제, ②국제법적 요건을 갖춘 정전체제에서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 ③동북아 다자안보 기구 등 평화안보 협력제도의 신설, 그리고 ④미-북 및 일-북 수교 정상화 등이 포함된 중층적 구조가 갖추어진 상태 등이 포함되고 있다. 여기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의 구축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러한 평화체제와 관련된 남북한의 입장과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의 전략

공산주의 적화전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평화’라는 화두(話頭) 속에는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평화적 핵 이용·평화협정·평화체제’라는 전략적 카드를 북한이 고심 끝에 가지고 나와 제안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북한은 평화공세를 통해 핵 문제의 고비를 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체제 관련 주장 논리는 적대정책 포기 요구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6자회담 등에서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 후, 핵 포기’라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즉, 북한은 자신에 대한 위협을 미국의 군사력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주한 미군과 한미 동맹체제가 제거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상태가 평화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이 중국의 동조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한국 내에서

8)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비통제』 제44호(국방부, 2008), pp.170-171.

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⁹⁾

평화체제 전환 관련 북한의 기본전략은 미-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술적 차원에서 정전협정의 사문화(死文化), 유엔사의 해체 등을 주장해 오고 있다.¹⁰⁾ 북한은 1974년 이전까지는 남북간 평화협정을 주장해 오다가, 1974년부터 협정 당사자를 미국으로 바꾸었고, 그 후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 왔다.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전략은 월남 모델에 기인한 것¹¹⁾으로서, 미-북 직접대화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심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 미군의 주둔 명분을 희석시켜 결국 주한 미군의 철수를 관철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한국의 안보구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기본 입장과 추진전략

한국은 평화체제 전환에 대해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이 이를 보장(Endorse)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당사자 해결원칙’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 미-북관계도 미-중관계도 아닌, 바로 남북 간의 적대적 대결의 해소라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상호 신뢰구축의 기반 위에서 ‘평화공존⇒평화협정 체결⇒불가침 협정 체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평화협정이 그동안의 전쟁상태를 종결하는 것이고, 불가침 선언은 이런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상호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당연히 평화협정이 우선적이고, 다음에 불가침 협정 및 선언이 따라야 한다¹²⁾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나 주한 미군 문제 등과 같은 한-미관계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변화를 일정 부분은 수용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배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³⁾

그런데,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정전협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①

-
- 9) 문성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 의제와 전략”, 『군비통제』 제47호(국방부, 2010), pp.126-127.
10) 문성복, “남북 군사회담 경험을 기초로 살펴본 북한의 협상전략”, 『군비통제』 제47호(국방부, 2010), pp.50-51.
11) 월남전쟁 당시, 월맹의 호지명은 1973년 1월 28일 월남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파리 평화협상’을 체결한 후, 월남전의 월남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군을 위태로운 평화조약 만을 믿게 만들었으므로 1974년 미군을 월남으로부터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2)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 『군비통제』 제47호(국방부, 2010), p.137.
13) 임길섭, “남북구도 변화시기와 전력규모 판단”, 『국방정책연구』 제66호(한국국방연구원, 2002), p.3

새로운 평화협정이 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대체하는 방안, ②새로운 평화협정에 의한 현 정전협정의 대체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현 정전협정에 대한 실질적인 사문화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 그리고 ③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한반도에 대해 관련자들이 협정을 체결한 다음, 이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되, 정전협정을 자동으로 사문화시키는 방안 등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대별해 볼 수 있다.¹⁴⁾ 그런데 정전체제 처리와 관련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안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 정전체제의 폐기를 명시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은 한국 측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 시 기본적으로 휴전협정의 폐기 및 수정 절차에 따라야 하고, 휴전협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내재되어 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가장 포괄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이나, 절차상으로 유엔·중국·한국·북한 등 모든 휴전협정 당사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이 방안은 곧 정전협정 제6조의 수정 및 증보가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과의 상호 회의를 거쳐 논의 및 체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하는 법안(평화협정)도 정전협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데다, 특히 적대 사령관과의 상호 회의를 거치는 과정은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우리 측의 당위성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정전협정 승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평화협정 상에 이를 명시할 경우, 절차의 적법성에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서명 당사자 논쟁이 있는 우리 정부가 평화협정을 주도하는데 제약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현 정전체제의 대체 및 승계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사문화시킨 채, 새로운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 상태를 강화하는 방안은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보완 절차 및 폐기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 측이 남북한 평화협정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과도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주변국의 협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 시 '새로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전협정 사문화 방안은 한국 측에 유리한 방안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으나, 자칫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정전협정을 사문화하는 방안은 ①현 정전협정의 이행상태남북관계평화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 의지 등을 고려시 새로운 평화협정과 정전협정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의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고, ②정전협정을 승계 및 보완하는데 정전협정 사령관 상호 간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으로써 남북한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14) 백승주,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과 정책방향", 『원광군사논단』 제3호(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7, p.303.

하는 한국 측의 당위성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정점이 있는 반면, “북한이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미-북 평화협정의 체결을 추진하여, 주한 미군의 주둔 명분을 의식시키고, 나아가 주한 미군의 철수를 관철시킬 경우, 근본적으로 한국의 안보구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전략에 한국이 말려들 우려가 있음”을 경계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관련국들이 ‘남북 기본합의서’와 같은 수준의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을 실시하는 방안은 ‘평화 공동선언’이 비록 구속력은 약하나,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정전협정 상의 평화유지 기능들을 남북한 등 관련국들이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평화체제 구축 논의 관련 주요 쟁점

앞서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한국 측의 주도에 의해 남북한 평화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관련된 북한의 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평화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서도 견해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견해가 다양한 만큼 평화체제에 포함될 내용도 일정하지 않아, 통상 평화협정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조항과 특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조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적대행위의 종류, 점령군의 철수, 압류재산의 반환, 포로의 송환, 그리고 마약의 부활 등을 들 수 있으며, 특수조항에는 손해의 배상, 영토의 할양, 요새의 파악 등이 포함될 수 있다.¹⁵⁾ 남북한 평화협정은 일반조항보다는, 특수조항 포함내용에 대한 비중과 관심이 더 경주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6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데 작동해 온 정전협정과 관련성, 새로운 적대행위의 포기, 새로운 평화기구의 설치, 그리고 남북한의 대외 군사협력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일반조항과 특수조항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해 전문가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정전협정과의 관련성 명시여부, ②한반도 평화관리기구 구성과 운영 주체, ③국제적 평화 보장체제의 주체, ④군사경계선 유지, ⑤외국군 철수 및 쌍무 동맹유지 문제, ⑥남북한 군비통제, ⑦전후 청산의 문제, 그리고 ⑧한반도 비핵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⁷⁾ 그러나 평화체제 구축 관

15) 김명기,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 (국제출판사, 1994), p.29.

16) 백승주,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과 정책방향”, 『원광군사논단』 제3호(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7), p.303.

17) 문성묵,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 문제”,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 1999), pp.23-26.

런 논의 배경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한반도 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미국 측이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는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핵 포기과 평화체제 간 선후관계', 즉 그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문제와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남북한 당사자 간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될 수 있는 '선 평화체제 상황요건 완비, 후 평화협정 체결' 문제 등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의 우선순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우선 체결한 후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한 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다. 북한 측 입장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상황요건 선행과 같은 평화체제의 우선 구축보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이러한 쟁점 논의과정에서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선 평화협정, 후 평화체제'에 동조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한국 측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평화협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한국 안보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제기할 의도가 높고, 6자 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핵 폐기'에 관한 북한의 상응조치가 대부분 평화체제 구축의 다양한 실질조치의 주요 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 되는 북한 핵 폐기를 먼저 유도할 수 있는 '선 평화체제 구축과 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설득시켜야 함¹⁸⁾이 요구되고 있다.

2) 평화체제와 핵 포기의 우선순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함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측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또 하나의 쟁점은 6자회담 주요 논의 주제인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의 상호 연관성 문제이다. 우선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평화체제는 좀 더 광범위한 종합적 개념이고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는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협의 형태의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 완료 후에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북한은 자신의 핵 포기는 평화체제의 선 구축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체제 용어는 평화협정과 거의 비슷한 개념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화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협정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논의과정

1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전략균형』 (한국 양서원, 2008), p.273.

에서 북한의 주장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도 평화협정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6자회담이라는 별도의 채널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검토는 가능하나, 본격적인 논의는 평화체제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가 북한의 자의적 포기행동으로 해결되고 난 이후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¹⁹⁾.

IV. 평화체제 구축 방식 및 구조화 조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개체하는 형식적인 절차나 법적·제도적 합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을 잘 추론하여 효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평화를 구조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실천 및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평화체제 구축방식과 적용과정 정립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크게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완성되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²⁰⁾ 먼저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평화체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①남북 기본합의서 상의 신뢰구축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공동 위원회 가동, ②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의 마련과 실천, ③북한의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포함한 한·미·일의 대북지원 본격화, ④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와 역락 사무소 설치, ⑤미-북 및 일-북 수교협상 본격화, 그리고 ⑥핵 폐기 검증 진행상황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개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²¹⁾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는 ①남북한 신뢰 및 교류협력 관계 정착 등 평화공존을 위한 제반 조건 실현, ②북한의 핵폐기 완료, ③미국 및 일본의 대북 수교, ④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실현, ⑤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상 실시, ⑥주한 미군의 철수 및 감축, 그리고 ⑦유엔군 및 동맹군으로서

19) 문장렬, “북한 핵문제의 회고와 전망”, 『군비통제』 제44호(국방부, 2008), p.89.

20) 김재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군비통제 추진방향”, 『원광군사논단』 제5호(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9, p.196.

21) 백승주, “2.13 합의조치 이후의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원광군사논단』 제5호(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7), pp.304-305.

의 주한 미군의 지위문제 해결 등이 포함되어지고 있다.²²⁾

2. 평화 구조화를 위한 실질 조치

‘평화 구조화’란,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는 것으로서, 평화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천 및 이행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크게 정치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가 포함되어질 수 있다.²³⁾ 남북 간에 근본적으로 뿌리내리고 군사적 대결은 사실은 정치적 대결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치적 대결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조치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여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 조치들로는 현재 ①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관련 협의기구의 가동, ②남북한 상호간 상대체제의 인정, ③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 성실 이행, 그리고 ④호혜적 관계에 기반을 둔 남북교류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⁴⁾

한반도 내에서 침예한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키고 안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는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넓은 의미의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군사사항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구축(CBM)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상호 합의 하에 군사력의 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통제하여 달성하는 실질적인 군비축소를 포함하고 있다.²⁵⁾

여기서, 운용적 군비통제란 군사적 투명성 제고와 기습공격 및 전쟁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군사력 배치 및 운용을 그 통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용적 군비통제 조치에는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고, 군사정보 및 자료 교환, 군 인사 교환 방문, 부대배치 제한지대 설정, 그리고 공세적 배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사력 균형 및 안정유지에 목적을 두고, 병력 및 무기체계를 통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조치로서는, 이러한 조치에는 재래식 무기 감축, 핵 및 생화학 무기 금지, 미사일 사거리 및 중량 통제, 그리고 상호간 부대 수 및 병력감축 등이 포함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비축소를 포함한 군비통제는 상호 군사위협 및 위협에 대한 남북한 공동인식을 기초로 군비통제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주변 위협변화를 고려하여 ‘정치적 신뢰구축⇒군비통제⇒군비축소’의 과

22) 김재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군비통제 추진방향”, 『원광군사논단』 제5호(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9), pp.198-200.

23) 문정인, “이명박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 피스 메이커들이 보는 쟁점과 과제』 (한반도 평화포럼, 2010), p.2.

24) 한용섭, 『“한반도 군비통제”』 (박영사, 2004), p.203.

25) 송대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관련 안보대책 방향”, 『원광군사논단』 제3호(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7), p.108.

정을 거쳐 다양한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남북한 군축문제가 활발히 진행된다 하더라도, 적정 규모의 전력, 특히 국토방위의 주력인 지상군 전력의 규모는 남북한 간에 상호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통일 후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26)

V. 결론 : 선행적 대비방향

최근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위협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오히려 점차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안정 정착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된 정부의 특별한 노력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체제의 구축은 이에 대한 막연한 추구만으로는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군사 위협과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구적 평화체제를 지향할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적 대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평화체제 접근에 대한 국내 국론분열의 초래를 예방하여야 한다. 한국 내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문제 발생 원인이 한반도의 냉전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핵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평화협상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이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에 대해 체제 보장을 제공하는 한편, 북한이 평화공존에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하므로, 평화체제의 전부가 아닌, 평화체제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요건이면서 안보불안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과 같은 평화협정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반 여건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건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는 잘못된 상황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화체제의 조건을 먼저 보장하는 접근자세가 매우 중요하да할 것이다.

둘째,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 동맹 문제들이 우선순위나 경중 및 본질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동시 병행적으로 논의될 경우, 한국 내 상황은 안보 불감증과 안보 불안감이 동시에 발생될 수

26) 남만권,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2004), pp.62-63.

있는 이중성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이나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거나 전향적 입장으로 변화될 경우, 한-미 동맹 이완에 관한 우려와 안보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한-미 동맹 측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엔사 및 연합사 운용과 같은 한-미 연합 방위체제 문제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연관되어 잘못 제기될 경우,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및 해외 미 주둔군 전력의 전략적 변환(Strategic Transformation)을 위한 재편 계획(GPR : Global Positioning Review)과 맞물려 한-미 동맹관계의 이완현상이 발생되거나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의 논의가 한반도 안보상황 및 구도의 변화로 인식되어 급격한 평화논의가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안보 불감증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는 심지어 '한-미 동맹이 왜 필요한가?'라는 잘못된 여론 발생 등 한-미 동맹 조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국방개혁 추진의 차질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제기 및 논의될 경우, 군사력 건설보다는 군비통제와 감축을 통한 군사적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므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프로그램의 수정이나 보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이 포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오류적 가정과 판단 하에 현재의 국방개혁 프로그램에서 대폭적인 군비감축이나 군비통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비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시급하고, 이러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선 정치적 조치 해결과 함께, 북핵 폐기 등 군비통제를 포함한 군사적 신뢰조치가 이루어진 평화체제의 제반 요건들이 구비된 이후,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북핵 폐기를 포함한 군비통제는 북한 측의 의지와 변화를 확인하면서,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으로부터 시작하는 점진적·단계적 방법으로 추진하되, 우리 군의 장·단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미-북 관계 변화 등을 연계하여 신중히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군비통제 추진방향”, 『원광군사논단』 제5호(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9)
- 남만권,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2004)
- 문성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 의제와 전략”, 『군비통제』 제47호(국방부, 2010)
- 문장렬, “북한 핵문제의 회고와 전망”, 『군비통제』 제44호(국방부, 2008)
- 박준홍,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박영사, 1978)
- 백승주, “2.13 합의조치 이후의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원광군사논단』 제5호(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7)
- 송대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관련 안보대책 방향”, 『원광군사논단』 제3호(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07)
- 임길섭, “남북구도 변화시기와 전력규모 판단”, 『국방정책연구』 제66호(한국국방연구원, 2002)
-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 『군비통제』 제47호(국방부, 2010)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평화체제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전략균형』 (한국 양서원, 2008)
- 한용섭, 『한반도 군비통제』 (박영사, 2004)
- 현인택,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 문제 : 세계의 평화협정의 함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 『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 George F. Kennen, “Is Detente Valuable?”, Saturday Review, 1976.
- Kenneth E. Boulding, “Conflict and Deterrence”, Harperd and Row Publishers : New York, 1962,

Switching over from Armistice Agreement System to Peace Agreement System in Korean Peninsular and It's Preparation under the Planning of Military Strategy of Two Koreas

Kim, Tae-Woong

We could connect the peace and the security of every state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war and the peace. We could appreciate that the peace is the ultimate purpose that the human kind have to pursue and the war is one of various means for achieving the peace, although the war and the peace have a inseparable relation as like two faces of the coin. And then we know that we could not maintain the peace as a ultimate purpose for the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that we have to pursue, if we could deter the war effectively.

The detente as a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which plays a important role for resolving the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originally could not be achieved by one-sided effort. But maintaining the delicate relation with political situation, It could be achieved by following procedure of resolving problems, whether we accept the political situation with permission of this situation as it stands or coordinate the given situation.

The facts that tension exists in itself means that the structure of present state makes up the political confron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very state to break down the given actual state and change it into new state in order to overcome the political conflict. Especially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for us to concentrate efforts for taking out the North Korea's change in order to make a Detente,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armistice agreement system which cause the military conflict and to construct the peace system, so called 'Peace-Building'.

Therefore political and military actual measures for the peace-building must be taken by mutual agreement and common effort between two Koreas. And then for this above all it is necessary for two Koreas to create the situational condition under the premise of complete destruction of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In this point of view with analysis of two Korea's strategy and main issues in the course of switching the armistice agreement system to peace system the writer would like to propose precedent conditions for the guarantee of the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after ratiocination of main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in the point of view of South Korea.

Key Words : War and Peace, Detent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Peace System, Armistice Agreement, Peace Agreement, Peace-Building, Destruction of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Main Issues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Military and Political Measures, Precedent Condition

투고일 : 2011.6.10 / 심사일 : 2011.7.10 / 심사완료일 : 2011.8.28